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 철회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내정 철회를 광주시민에 촉구했다.

광주복지재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신 후보자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 어떤 면에서도 광주시민과 복지계의 인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시 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용섭 광주 시장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신 후보자는 호남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5년 사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자리를 옮긴 뒤 10여년이 넘도록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논문을 내지 않았다"면서 "지역사회 정책자문 등 복지현장과의 교류와 소통도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복지재단과 산하 노인복지시설의 무용론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재단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부족하고 혁신적 대안과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대비 복지 체감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진단,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을 볼 때 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와 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02년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복부 규정을 위반했고 딸과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 가족 경영을 해왔다"면서 "대표로 있는 기관은 간호사 미배치, 조리원 미달 배치, 통화 차량 미신고 등으로 받은 한 달 간 운영정지 조치를 과징금 615만 원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기관 대표직을 직임으로 여기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그의 인식과 현실감 부재를 보여준다"면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일하면서 봉건적인 가족 경영과 운영 미숙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것은 자질·도덕성의 결함이다"고 날을 세웠다.

신 후보자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0건의 교통 위반으로 벌칙금 2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점도 결정 사유로 꼽았다.

단체는 "신 후보자는 복지현장과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광주복지에 대한 문제의식·비전이 전무한 데다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 후보자가 2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시장에 대한 지지활동을 한 사실은 보은성 인사의혹이 나온 배경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전문성 부족·도덕성 결여 지적

"시의회, 신 후보자 부적격 판정 내려야"

단체는 "신 후보자의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이 시장은 재단 혁신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신 후보자 내정

선임을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에 통보한다. 임명 여부는 이 시장이 결정한다.

서은홍 기자



방심할 수 없는 '봄 미세먼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검찰, 윤장현 전 시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기범 자녀 취업 도운 1명 불구속기소·2명 약식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당한 혐의로(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사립학교 관계자에 김 씨 딸의 취업을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도운 당시 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업무방해)를, 모 사립학교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시장

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 전 시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

았다.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주춘정 기자

SNS 허위유포뎀 최대 징역 3년9개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림 훼손에 건물주 흥기로 찢른 화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건물주를 흥기로 찢른 혐의(특수상해)로 세입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건물주 B(46)씨를 흥기로 찢른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가인 A씨는 '다툼 과정에 B씨가 그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 선불금 착취 50대 악덕 소개업자 구속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허가 악덕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선주와 구직 선원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5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께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그 동안 11차례 걸쳐 32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670만 원을 착취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가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선대학교 대학원생 A씨가 자신을 지도하는 B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9일 오후 9시께 서울의 한 술집에서 B교수와 다른 대학원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B교수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B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마초 밀매 판매금 세탁 1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대마초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168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금 4100만 원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모 지하철역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초를 챙겨 경북지역 자신의 자택에서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마약 판매상이 계좌로 입금해준 돈을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바꿔 보내준 뒤 수수료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도박사이트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던 중 마약 판매상과 접촉했으며,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에서 대마초가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실제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검색, 구매자로 위장했다.

경찰이 17만 원을 보내자 대마초 1.7g를 받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공범이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 유통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던지기 수법은 마약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통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붙여두는 것을 뜻한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